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2-57호 | 2022년 12월 27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이연희 원장직무대행 | idp.theminjoo.kr

통계 왜곡한 윤정부, 추가연장근로제 즉시 폐지하라

남 국 현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 요 약 》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현황

-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근로현장에서는 추가연장근로제의 시행기업이 적고, 52시간 근무제가 안정화되는 상황임
 - 30미만 사업장의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도 못 미침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영향 및 쟁점사항

-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산업별로 정규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을 합해도 주당 52시간에도 미치지 못해 실제 현장에서 추가연장근로제가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효과가 없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근로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음
- 중기중앙회는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이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중이라고 하여, 마치 91% 기업이 추가연장근로제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통계를 왜곡함
 - 중기중앙회는 30인 미만 전체사업장의 17.8%, 본 보고서는 1.2%가 추가연장근로제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정책제언

- 정부는 통계를 왜곡한 중기중앙회의 자료를 인용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조사하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재검토해야 함
- 정부가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로를 연장하려는 것은 근로현장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임
- 52시간 근무제는 근로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확대 정책이 필요함
- 근로시간 연장보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키워드: 추가연장근로제, 초과 근로시간, 고용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현황

○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근로현장에서는 추가연장근로제의 시행기업이 적고, 52시간 근무제가 안정화되는 상황임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개요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21년 7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부담을 덜기 주기 위하여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22년 12월말)으로 허용한 제도임
 -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로 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적용됨
- (정부입장) 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불가피, ②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 조선산업과 정보기술(IT) 분야의 피해가 우려, ③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으로 생계보장 불가능
- (노동계 입장) 한국노총은 ① 52시간제 단계적 시행을 위한 여야 합의 위반 ②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되는 산재사고 등을 이유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반대 입장

○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현황

- <표 1>을 보면 22년 9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100인~299인 사업장의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3.4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0~299인 3.1시간, 300인 이상 2.8시간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주당 초과근로시간이 12시 연장근로시간에도 못 미쳐,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1> 규모별 주당 근로시간(단위: 시간)

규모별	정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전규모(1인 이상)	38.8	2.0
1인~29인	38.8	1.2
30~99인	38.8	3.1
100~299인	38.5	3.4
300인 이상	39.2	2.8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가공하여 작성

<표 2> 30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로시간(단위: 개)

초과근로시간	사업장수	구성비(%)
0	4,532	74.1
0초과 ~ 12이하	1,512	24.7
12초과 ~ 20이하	69	1.1
20초과	4	0.1
계	6,117	1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가공하여 작성

- <표 2>에서 22년 9월 30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로시간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조사함
 - 초과근로시간이 0인 사업장이 4,532 곳으로 7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0초과 ~12시간 이하의 사업장이 1,512곳으로 24.7%로 12시간 이하가 전체 98.8%로 나타남
 - 1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 곧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73곳으로 30인 미만 전체 사업자의 1.2% 수준으로 조사됨

2.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영향 및 쟁점사항

1)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영향

- 22년 9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전체 평균 1.2시간으로 조사됨
 - 산업별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광업과 전기·가스·증기업이 3.3시간으로 가장 높음
 - 정부가 추가연장근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조업도 초과근로시간이 2.2시간에 불과함
-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산업별로 정규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을 합해도 주당 52 시간에도 미치지 못해 실제 현장에서 추가연장근로제가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함

<표 3> 산업별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당 정규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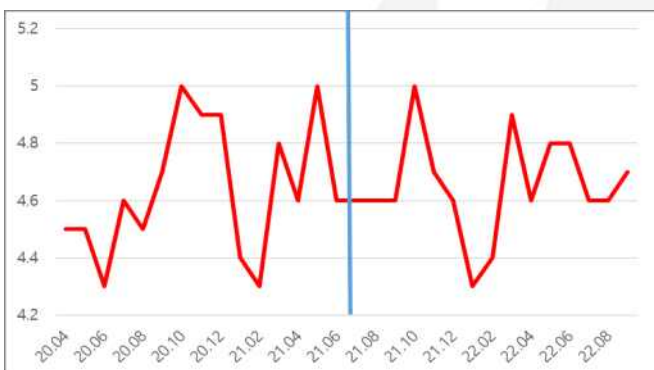
산업분류	정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산업분류	정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전체	38.8	1.2	운수·창고업	39.0	1.5
전기가스증기업	39.5	3.3	숙박·음식업	38.4	1.3
광업	39.0	3.3	도소매업	38.8	1.2
제조업	39.1	2.2	정보통신업	39.3	1.1
수도·하수·폐기물업	39.2	2.0	사업시설관리업	37.3	0.9
예술·스포츠·여가업	36.6	1.7	금융보험업	39.8	0.9

주 : 이외 업종인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업, 건설업, 부동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0.9시간 미만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가공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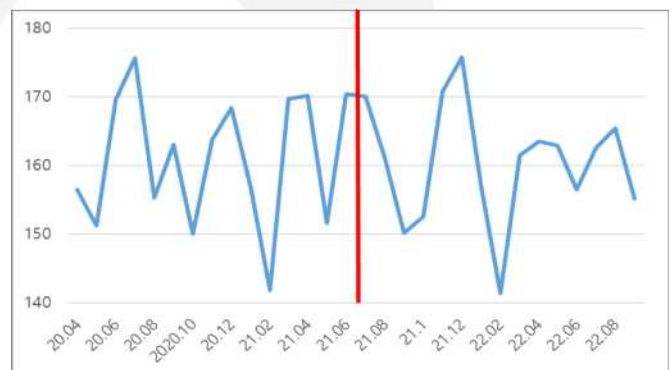
- <그림 1,2>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연장근로제의 도입 (21.7)전과 도입 후의 변이계수를 조사하여 비교함

<그림 1> 30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로시간의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30인 미만 사업장의 정규근로시간의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표 1>에서 도입 전 초과근로시간의 평균 4.64, 변이계수 5.1%, 도입 후 평균 4.65, 변이계수 3.8%로 나타나, 도입 후 근로시간변동이 도입전보다 안정적임
 - <표 2>에서 도입 전 초과근로시간의 변이계수는 6.1%, 도입후 5.4%로 나타나, 추가연장근로제

도입 후 근로시간의 변동이 도입전보다 안정적으로 분석됨

※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것으로 두 그룹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를 비교하고, 변이계수가 작은 그룹의 데이터가 안정적이라 볼 수 있음

- 추가연장근로제 도입 후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하지 않고, 초과근로시간의 변동이 더 안정적으로 변한 것은 추가연장근로제의 효과가 없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쟁점사항

- 중기중앙회의 설문조사는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이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라고 하여, 마치 91% 기업이 추가연장근로제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사실은 주 52시간 초과기업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므로 이들 가운데 91%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전체 기업에서 91%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착시현상이고 통계적 조작임
 - 실제로는 조사대상 400개 중 71곳이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한 적이 있으므로 17.8%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업체이고, 그리고 조사수도 작아서 신뢰성이 부족함
 - 본 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 자료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 6,117 곳 중 73곳이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여 있어 전체 사업장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표 4>에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30인 미만 사업장 전체 227.7시간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159.9시간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치임
 - 중기중앙회의 조사자료는 평균 근로시간만 조사되어 있고, 구체적인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주 60시간 초과여부만 조사되어 사업장별 초과근로실태에 대해 자세히 파악할 수 없음

<표 4>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보유 여부

(단위 : %, 시간)

구 분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보유 여부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보유 기업 대상				
		사례수	미보유	보유	사례수	평균 근로시간		주60시간 초과 근로자 보유 여부	
						월평균	주평균	미보유	보유
전 체		(400)	80.5	19.5	(78)	227.7	56.9	71.8	28.2
소재지	수도권	(161)	79.5	20.5	(33)	228.1	57.0	69.7	30.3
	비수도권	(239)	81.2	18.8	(45)	227.4	56.8	73.3	26.7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사용 경험	사용 중	(56)	5.4	94.6	(53)	233.5	58.4	62.3	37.7
	사용 경험 있음	(82)	78.0	22.0	(18)	215.0	53.8	88.9	11.1
	사용 경험 없음	(262)	97.3	2.7	(7)	215.7	53.9	100.0	-
매출액	10억원 미만	(40)	90.0	10.0	(4)	223.0	55.8	71.8	28.2
	10억원~30억원 미만	(143)	79.7	20.3	(29)	228.2	57.1	75.0	25.0
	30억원~50억원 미만	(114)	83.3	16.7	(19)	225.2	56.3	72.4	27.6
	50억원 이상	(103)	74.8	25.2	(26)	229.5	57.4	63.2	36.8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3. 정책제언

- 정부는 통계를 왜곡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를 인용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통계를 조사하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재검토해야 함
 - 추경호 장관발언,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정보기술(IT)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 정부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지만, IT 분야에서도 주52시간제의 도입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남(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1)
 - ‘주 평균 40시간’ 근무자 29.9% → 62.7%로 증가, ‘주 평균 46~51시간’ 근무자는 25.4% → 6.9%로 감소, ‘52시간 이상’ 근무자는 24.9% → 7.9%로 감소함
-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시간 연장관리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여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로를 연장하려는 것은 근로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임
 - 초과근로시간은 전규모(1인이상) 사업장에서 평균 2시간 조사되어 초과근로시간이 필요하지 않음
- 2018년 7월부터 도입한 문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화 세대(1950~60년)가 은퇴하고, MZ 세대의 고용이 확대되는 시점에, MZ 세대는 여가, 자기계발 등 워라벨을 중시하는 세대로 장기간 근로는 시대적 환경에 부적합
-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확대 정책이 필요함
 - 통계청 자료(22년 11월)에 구직자는 실업자 666천명, 잠재취업가능자 69천명, 잠재구직자 1,293천명 등 총 2,028천명으로 이들에게 직업훈련과 병행하여 고용지원을 강화함
 -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고용을 확대할 필요
- 근로시간 연장보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10~29인 노동생산성 비중은 27.6%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시급하고,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함
 - 규모별 월평균임금은 30인 미만 3,631천원, 30~99인 4,664천원, 100~299인 4,924천원, 300인 이상 5,642천원으로 기업규모별 노동시장의 저임금과 고임금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함
 -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노출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함
-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조선·제조분야 인력부족이 부족한 것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원인
 -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50.1%가 집중되어 지방기업의 인력난 초래
 - 대기업이 수도권 지역에 81.4% 입지하여 인력과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이 필요함